‘세종시 부처 이전 백지화’ 초안 마련

정부, 자족기능용지 6.7%서 20.2%로 확대

수정 최종안 다음달 10일께 제시

정부가 7일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原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대신 기업·연구소·대학 등이 들어서는 내용의 ‘신(新) 세종시’ 초안을 마련, 향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종시 수정 최종안을 다음달 10일께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송석구 민간위원장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 4차회의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세종시 대안과 원안에 대한 비교분석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용지를 기존 6.7%에서 20.2%로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과학·교육·경제 기능을 연계, 협력하는 것을 가정해 세종시의 인구·고용 창출 효과 등을 분석했으며 KDI는 원안과 초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송 위원장은 회의 직후 “연구개발(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이 발전방안(대안)이 높았다”며 “또한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 방안 쪽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모두 다 가는 것과 전혀 안 가는 것을 전제로 극단적인 2개 안(案)을 논의한 것”이라며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정부안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KDI가 보고한 세종시 초안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들어서는 세종시의 자족용지는 기존 150만평(약 500만㎡)에서 450만평(약 1천500만㎡)으로 3배가량 확대된다. 정부는 확대되는 자족용지의 상당 면적을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저렴한 원형지(原型地 : 개발계획 수립 이전의 용지) 형태로 제공해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세종시특별법에는 공공기관만 원형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5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세종시 수정안 발표 시기를 애초 예정했던 이달 중순보다 20여일 정도 늦은 다음달 10일께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회 예산안 처리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수정안 발표를 내년 1월 초로 늦춰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청와대와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여야, 예산안·복수노조 대충돌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예산뿐 아니라 복수노조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도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연말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오는 9일까지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5일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 예산안 삭감·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4대강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어 예결위 심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야당을 재촉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 사업비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예산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노동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결특위 활동에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이날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되지 못할 경우 전체 예산에 대한 처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운찬 국무총리가 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MB “4대강·세종시 감성 대응 안돼”

전국 지방신문 편집국장 오찬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방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과 관련, “국가 백년대계에 관련된 것은 감성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 냉철하게 한걸음 물러서서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도)할 수 있지만 언론 본연의 자세는 국가 장래를 두고 무엇이 도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도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충청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한다.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충청도민이 행정수도를 이전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도 다음 대통령 때로 미뤄 버릴까도 수차례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면서 국가를 위해 한번 하는 것이니까 아마 충청도민이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는 광주일보 등 지역 신문사 37개, 지역민방 9개사의 편집·보도국장들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주공·토공 졸속 통합으로 1조 감세”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정부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졸속 추진하면서 추가과세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자 1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양 공사의 통합에 따른 주식가치를 잘못 계산해 토지주택공사와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등록세·법인세 등 9천980억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정부가 주공·토공 통합 과세문제를 뒤늦게 알고 등록세와 법인세를 소급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 정책평가’ 법안 제출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은 7일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정책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법안은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건설사업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의 경우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성과계획서는 정부 사업의 성과 목표와 지표를 담은 것으로 국회가 이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 예산심의에 참조하기 위해 노무현정부 시절 도입된 것이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의적으로 성과계획서를 누락해 국회가 이에 대한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애완동물 부가가치세 재검토해야”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완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다”며 “기획재정부가 국제적 기준을 과세 근거로 제시했으나 OECD 국가 중 일본과 미국 하와이 등 일부 지역에서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물진료의 경우 사람과 같이 의료보험제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여기에 10%의 부가세는 서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케하는 만큼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